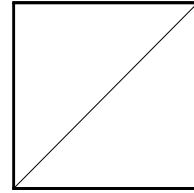


공 개



의안번호	제 341 호
의 결 연 월 일	2023. 11. 29. (제 21차)

의
결
사
항

(주)우리은행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 본 안건은 수정의결되었는바 관련 의사록과 의결서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 출 자	위원장 김 주 현
제출 연월일	2023. 11. 29.

1. 의결주문

(주)우리은행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하고,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라 의견제출기한 내에 조치대상자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의 조치안을 그대로 확정하며,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부여된 의견제출 기한 내에 제재조치 대상자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의 조치안을 그대로 확정한다.

2. 제안이유

(주)우리은행에 대해 실시한 수시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부당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외국환거래법」상 은행의 확인 의무 및 서류보관 의무 위반, 거짓검사 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주)우리은행에 대하여 과태료·과징금 부과 및 영업소 업무의 일부정지 조치를 하고, 「은행법」상 금융사고 예방대책 관련 내부 통제기준 미준수 및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를 하고자 함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전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 : <붙임>

다. 관계부서 협의

- 제10차, 제12차, 16차 제재심의위원회(2023.4.20., 5.9., 5.26.) 심의필
- 제17차, 제20차, 제21차 안전검토 소위원회(2023.9.21., 11.9., 11.23.) 심의필

<별지>

(주)우리은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내용

□ 기관에 대한 조치

- (주)우리은행 : 과태료 177,000,000원 부과
- 대림3동지점 : 업무의 일부정지* 6개월
 - * 정지대상업무 : 외국환 지급 신규업무(이미 일부에 대한 지급이 개시된 거래로서 조치 효력 발생 전 확인된 한도 내에서 취급하는 지급은 제외)
- 동탄역금융센터 : 업무의 일부정지* 6개월
 - * 정지대상업무 : 외국환 지급 신규업무(이미 일부에 대한 지급이 개시된 거래로서 조치 효력 발생 전 확인된 한도 내에서 취급하는 지급은 제외)
- 오리역지점 : 업무의 일부정지* 6개월
 - * 정지대상업무 : 외국환 지급 신규업무(이미 일부에 대한 지급이 개시된 거래로서 조치 효력 발생 전 확인된 한도 내에서 취급하는 지급은 제외)
- 은평뉴타운지점 : 업무의 일부정지* 6개월
 - * 정지대상업무 : 외국환 지급 신규업무(이미 일부에 대한 지급이 개시된 거래로서 조치 효력 발생 전 확인된 한도 내에서 취급하는 지급은 제외)
- 을지로5가금융센터 : 업무의 일부정지* 6개월
 - * 정지대상업무 : 외국환 지급·수령 신규업무(이미 일부에 대한 지급·수령이 개시된 거래로서 조치 효력 발생 전 확인된 한도 내에서 취급하는 지급·수령은 제외)
- 가산IT금융센터 등 13개 영업소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관련하여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므로 우리은행에 대해 과징금 271,454,469원* 부과 건의
 - * 각 영업소별 과징금 합계액이며, 영업소별 위반사실 및 과징금 금액은 다음과 같음

지점	위반사실	과징금 금액
가산IT금융센터	지급 등의 증빙서류 확인 의무 위반 외국환거래 관련 서류보관 의무 위반	103,646,545원
강남교보타워금융센터	외국환거래 관련 서류보관 의무 위반	7,393,562원
김포구래지점	거래 관련 서류보관 의무 위반	14,454,202원
남역삼동금융센터	거래 관련 서류보관 의무 위반	6,119,101원
노원금융센터	거래 관련 서류보관 의무 위반	715,768원
부평금융센터	지급 등의 증빙서류 확인 의무 위반 외국환거래 관련 서류보관 의무 위반	8,770,958원
센텀시티지점	지급 등의 증빙서류 확인 의무 위반 외국환거래 관련 서류보관 의무 위반	27,717,874원
영등포중앙금융센터	지급 등의 증빙서류 확인 의무 위반 외국환거래 관련 서류보관 의무 위반	23,773,386원
원남동지점	제3자 지급 신고 대상 여부 확인 의무 위반 외국환거래 관련 서류보관 의무 위반	6,947,145원
종로4가금융센터	제3자 지급 신고 대상 여부 확인 의무 위반 외국환거래 관련 서류보관 의무 위반	14,048,031원
코엑스지점	지급 등의 증빙서류 확인 의무 위반 외국환거래 관련 서류보관 의무 위반	24,869,773원
파주남지점	지급 등의 증빙서류 확인 의무 위반 외국환거래 관련 서류보관 의무 위반	5,269,207원
효자동금융센터	지급 등의 증빙서류 확인 의무 위반 외국환거래 관련 서류보관 의무 위반	27,728,917원

- 조치사유 : ① 외국환거래법 위반
 - ② 금융사고 예방대책 관련 내부통제기준 미준수
 - ③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의무 위반
- 법적근거 : 「외국환거래법」 제8조(외국환업무의 등록 등) 제6항
 - 「외국환거래법」 제10조(업무상의 의무) 제1항
 - 「외국환거래법」 제12조(인가의 취소 등) 제1항 제5호의2, 제7호, 제5항
 - 「외국환거래법」 제12조의2(과징금) 제1항, 제2항
 - 「외국환거래법」 제20조(보고·검사) 제4항, 제6항
 - 「외국환거래법」 제32조(과태료) 제4항
 -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17조(업무 수행에 관한 기준) 제1호, 제4호
 -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22조(인가의 취소 등), <별표2>
 -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23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별표3>
 -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35조(검사) 제4항 제2호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4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4>
 「외국환거래규정」 제2-1조의2(지급 및 수령) 제1항, 제2항, 제4항
 「외국환거래규정」 제4-2조(지급등의 절차) 제1항
 「외국환거래규정」 제4-3조(거주자의 지급등 절차 예외) 제1항 제2호
 「은행법」 제34조의2(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 제2항
 「은행법」 제34조의3(금융사고의 예방) 제1항 제1호
 「은행법」 제69조(과태료) 제1항 제5호의2, 제5호의3
 「은행법시행령」 제20조의2(불건전 영업행위의 구체적인 유형 등) 제5호
 「은행법시행령」 제20조의3(금융사고 예방대책 등) 제1항 제1호
 「은행법시행령」 제3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4>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의3(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2항 제2호

2. 조치사유

가. 외국환거래법 위반

(1) 제3자 지급업무 취급시 신고 대상 여부 확인 의무 위반

□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3호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 제3항 등에 의하면 거주자가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 또는 수령을 하려는 경우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외국환거래법」 제10조 제1항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2-1조의2 제2항 등에 의하면 외국환은행의 장은 건당 미화 5천불을 초과하는 지급 등에 대해서는 당해 지급등이 법·영 및 이 규정에 의한 신고등의 대상인지 및 신고등의 대상인 경우 신고등을 한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 (주)우리은행의 은평뉴타운지점 등 5개 영업소는 2021.9.7.~2022.8.23. 기간 중 거주자인 (주)○○ 등 5개사로부터 수출입거래 상대방에 대한 수입거래대금 지급(40건, 미화 9,098,331불)을 요청받아 이를 처리하면서

- (주)○○ 등이 수출입거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계좌로 송금 요청한 건에 대해 해당 지급이 한국은행 총재 앞 신고의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음

(2) 지급 등의 증빙서류 확인 의무 위반

□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6항,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7조 제4호, 「외국환거래규정」 제2-1조의2 제1항 및 제4항 등에 의하면 외국환은행의 장은 건당 미화 5천불을 초과하는 외국환거래 취급 시 지급등을 하려는 자로부터 지급등의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이하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 (주)우리은행 은평뉴타운지점 등 12개 영업소는 2021.4.12.~2022.6.14. 기간 중 (주)○○ 등 16개사로부터 건당 미화 5천불을 초과하는 수입거래대금 지급(398건, 미화 538,220,969불)을 요청받아 이를 처리하면서,

- 증빙서류를 제출받지 않고 지급하거나, 제출받은 증빙서류에 중대한 형식상 하자 또는 내용상 오류가 있어 지급사유를 적정하게 확인할 수 없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 없이 외화 송금업무를 취급한 사실이 있음*

* 아래 <표> '증빙서류 확인의무 위반유형별 건수 및 금액' 참조

증빙서류 확인 의무 위반유형별 건수 및 금액 (주)우리은행)

(단위: 건, 미달러)

위반유형(형식상 하자 또는 내용상 오류)	거래내역	
	건수	금액
(1) 증빙서류 미징구·미확인	65	59,226,613
(2) 계약서상 계약 당사자 오기재	19	14,011,080
(3) 증빙서류간 내용 불일치 (선적일 등 중요정보 불일치)	129	112,548,721
(4) 인보이스 및 계약서에 발행인의 서명 또는 인감 날인이 없는 등 서류의 형식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	207	384,523,974
합계(중복 제거)	398	538,220,969

(3) 외국환거래 관련 서류보관 의무 위반

-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6항,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7조 제1호, 제4호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2-1조의2 제2항 등에 의하면 외국환은행의 장은 지급의 경우에는 지급신청서를,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수령으로써 동일자·동일인 기준 미화 5만불(2018.12.24. 이전에는 미화 2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영수확인서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하는데도,
- (주)우리은행 은평뉴타운지점 등 18개 영업소는 2018.1.1.~2022.6.30. 기간 중 대외지급·수령한 보관대상 서류 191,983건중 11,588건(6.0%)을 보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대외지급·수령 서류 미보관 현황(18개 영업소)

(단위 : 건, %)

영업소	해외송금 지급신청서			해외수령 영수확인서		
	보관대상 건수(A)	미보관 건수(B)	분실율 (B/A)	보관대상 건수 ¹⁾ (C)	미보관 건수(D)	분실율 (D/C)
김포구래	7,077	2,585	36.5	2	1	50.0
센텀시티	4,307	706	16.4	2	1	50.0
영등포중앙	4,620	664	14.4	5	-	-
오리역	5,742	756	13.2	-	-	-
효자동	7,509	268	3.6	22	9	40.9
가산IT	37,288	3,515	9.4	2	-	-
동탄역	8,600	468	5.4	10	-	-
원남동	5,096	372	7.3	3	-	-
대림3동	3,002	143	4.8	19	-	-
부평	16,494	722	4.4	6	2	33.3
남역삼동	11,931	410	3.4	16	-	-
종로4가	10,052	288	2.9	2	1	50.0
코엑스	10,574	246	2.3	21	10	47.6
파주남	3,775	68	1.8	3	-	-
노원	2,644	37	1.4	15	-	-
은평뉴타운	2,021	18	0.9	6	-	-
을지로5가	3,842	23	0.6	3	1	33.3
강남교보타워	47,246	274	0.6	26	-	-
전체	191,820	11,563	6.0	163	25	15.3

1) 수령의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제4-3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2018.12.24. 이전에는 미화 2만불 초과, 이후에는 미화 5만불 초과하는 경우 보관대상 서류에 포함

(4) 외국환거래 관련 거짓검사자료 제출

- 「외국환거래법」 제20조 제4항 등에 의하면 금융감독원장은 검사를 위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금융감독원장의 업무에 관한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여야 하는데도,

- (주)우리은행 은평뉴타운지점 등 3개 영업소는 검사실시기간 중 금융감독원의 검사자료 제출 요구에 대하여 사후에 수령 또는 보완된 지급신청서 등을 제출하면서 서류의 출력일자, 워터마크 등을 삭제하는 등 총 23건의 지급신청서 및 증빙서류가 외국환거래업무 취급 당시 제출받은 서류인 것처럼 거짓으로 제출한 사실이 있음

3개 영업소의 외환거래서류 거짓 제출 현황

영업소	건수	금액(미달러)	유형
은평뉴타운	17	31,335,577	㉞○○ 등 증빙서류 보완
을지로5가	4	4,837,406	□□□□㉞ 지급신청서 및 증빙서류 보완
오리역	2	2,378,239	□□□□㉞ 지급신청서 및 증빙서류 보완
합계	23	38,551,222	

나. 금융사고 예방대책 관련 내부통제기준 미준수

- 「은행법」 제34조의3 제1항 제1호 및 「은행법 시행령」 제20조의3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은행은 지점의 금융사고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하고,

* 은행 임직원의 사기·횡령·배임·절도·금품수수 등 범죄혐의가 있는 행위에 대한 방지대책

- (주)우리은행 내규 「사고예방업무지침」 제3조에 의하면 임직원은 외환거래에서 고객의 불법 또는 변칙적인 거래행위를 지원하거나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 (주)우리은행 은평뉴타운지점 前지점장 ▲▲▲은 2021.10.21.~2022.6.14. 기간 중 (주)◆◆◆◆◆◆◆◆◆◆ 등 4개 업체의 송금거래(255건, 미화 329,468,264불)를 취급하면서 동 업체가 가상자산 차익거래를 하는데 도움*을 주기로 하여 동 업체의 송금 관련 무역거래가 허위거래임을 알면서도 취급하는 등 동 업체들의 미등록 외국환업무에 깊이 관여** 하였고,

* ▲▲▲은 도움의 대가로 업체 관계자로부터 2천3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

** ▲▲▲은 (주)◆◆◆◆◆◆◆◆◆◆로부터 동 업체가 송금해야 할 금액(수입대금)을 외화가 아닌 원화 금액으로 연락을 받으면서 거래환율을 먼저 알려주면서 업체가 인보이스상 수입대금 및 수입물품 수량 등을 조정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여

- 2022.5.12.~2022.6.13. 기간 중 (주)○○의 송금거래(13건, 미화 12,785,379불)를 취급하면서 동 업체의 송금 관련 무역거래가 허위거래임을 알면서도 취급하는 등 동 업체의 미신고 자본거래를 지원하였으며, 서부영업 본부는 은평뉴타운지점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여 前지점장 ▲▲▲의 범죄행위를 방지하지 못하였는바,

※ 상기 제재대상사실 관련 ▲▲▲은 무등록 외국환업무 공동정범, 자본거래 미신고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3년 선고(대구지법 2022고단4066, 2023.1.11.)

- 이로인해 (주)우리은행에서는 약 8개월의 장기간에 걸쳐 총 268건, 342,253,643불(약 4천2백억원 상당)의 불법 송금거래가 발생하였음

다.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의무 위반

□ 「은행법」 제34조의2 제1항 등에 의하면 은행은 감사통할책임자의 확인 및 영업점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거래처의 통장 또는 인감 등을 보관해서는 아니되는데도,

- (주)우리은행 은평뉴타운지점 등 2개 영업점은 □□□□(주) 등 2개 거래처의 통장 또는 인감을 감사통할책임자의 확인 및 영업점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보관한 사실이 있음

* 은평뉴타운지점: 2021.7.6.부터 통장 및 인감 보관
(2021.7.6.~2022.7.4. 기간 중 62건 송금)
을지로5가금융센터: 2022.5.13.부터 통장 및 날인된 지급신청서 보관
(2022.5.20. 2건 송금)

불건전 영업행위 및 관련 송금 현황

(단위 : 건, 천미달러)

지점명	불건전 영업행위 (거래처 통장인감 보관)		해외 송금		비고
	통장	인감	건수	금액(달러)	
은평뉴타운	6 ^{1,2)}	1	62	4,962	- 개인(김OO) 통장 및 인감 보관
을지로5가	1 ³⁾	-	2	1,169	- 법인(□□□□(주)) 통장 및 날인된 지급신청서 보관
합계	7	1	64	6,131	-

1) 은평뉴타운지점의 경우 임의 보관한 6개 통장 중 4개 통장에 대해 해외송금 거래 취급
 2) 김OO 통장 계좌번호: 1002*****4183, 1002*****8699, 1002*****4553, 1081*****9304, 1081*****5955, 1081*****2929
 3) □□□□(주) 통장 계좌번호: 1005***178502

< 붙임 >

관계법규

□ 「외국환거래법」

제8조(외국환업무의 등록 등) ⑥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업무상의 의무) ①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 및 외국환중개회사(이하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라 한다)는 그 고객과 이 법을 적용받는 거래를 할 때에는 고객의 거래나 지급 또는 수령이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인가의 취소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등록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영업소를 포함한다)의 업무를 제한하거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5의2. 제8조제6항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7. 제10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11. 제20조제4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2(과징금)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업무를 제한하거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갈음하여 그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③ 과징금의 부과,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분할납부, 담보, 그 밖에 과징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 거주자 간,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또는 비거주자 상호 간의 거래나 행위에 따른 채권·채무를 결제할 때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제18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환수급 안정과 대외거래 원활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거주자가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 또는 수령을 하거나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그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와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

제20조(보고·검사)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효율적인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나 그 밖에 이 법을 적용받는 거래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업무와 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금융감독원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위반행위의 목적물 가액의 3배가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벌금을 목적물 가액의 3배 이하로 한다.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확인하지 아니한 자

제32조(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제20조제4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 제출을 한 자

□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17조(업무 수행에 관한 기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는 거래 내용을 기록하고 관련 서류를 보존할 것
4. 그 밖에 외국환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따를 것

제22조(인가의 취소 등)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3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30조(지급 또는 수령 방법의 신고) ① 법 제16조에 따라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을 신고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고 서류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검사)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금융감독원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여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한국은행총재: 다음 각 목의 자에 대한 업무. 다만, 나목의 자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에게 검사를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장이 수행하는 검사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라목의 자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에게 검사를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장이 수행하는 검사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가. 외국환중개업무를 영위하는 자와 그 거래 당사자 및 관계인

나. 제37조제3항제3호에 따라 한국은행총재가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의 대상인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중 「한국은행법」 제11조에 따른 금융기관

다. 제37조제3항제11호에 따라 한국은행총재가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에 관련되는 보고 대상자

라. 제37조제3항제13호에 따라 한국은행총재가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의 대상인 부담금납부의무자

2. 금융감독원장: 다음 각 목의 자에 대한 업무. 다만, 제1호 각 목의 자에 대한 업무(제1호 단서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및 제3호 각 목의 자에 대한 업무는 제외한다.

가. 외국환업무를 취급하는 자와 그 거래 당사자 및 관계인

나~라. (생략)

3. 관세청장: 다음 각 목의 자에 대한 업무

가. 환전업무를 영위하는 자와 그 거래 당사자 및 관계인

나. 수출입거래나 용역거래·자본거래(용역거래·자본거래의 경우 수출입거래와 관련된 거래 또는 대체송금을 목적으로 법 제16조제3호 및 제4호의 방법으로 지급하거나 수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당사자 및 관계인

제4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2]

등록·인가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22조 관련)

1. 일반기준

기획재정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100의 50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위반행위가 등록 또는 인가 취소 대상인 경우(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등록 또는 인가 취소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고,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의 위반행위가 착오 또는 과실로 인한 것임이 인정되는 경우이거나 위반의 내용 정도가 경미한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경고로 처분을 갈음할 수 있다.

가. 가중 사유

- 1) 1년에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각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업무정지 기간을 합산하여 총업무정지기간을 계산하되, 동일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총업무정지기간을 기준으로 가중 처분할 수 있다.
- 2)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100분의 30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감경 사유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외환시장 및 금융기관 이용자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해당 외국환업무를 모범적으로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4) 위반 사유를 지체 없이 시정한 경우

2. 개별기준

해당 행위	해당 법조문	처분기준
바.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12조 제1항제5호의2	업무정지 2개월
차.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확인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12조 제1항제7호	업무정지 2개월
거. 법 제20조제4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12조 제1항제11호	업무정지 3개월

[별표3]

과징금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

1. 기획재정부장관은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에 다음 각 목의 부과 비율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 가. 업무정지 1개월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20
 - 나. 업무정지 2개월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40
 - 다. 업무정지 3개월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50
 - 라. 업무정지 4개월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70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100분의 50 이상을 과징금으로 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2 제1호나목1) 또는 4)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위반행위가 1년 이상 지속되거나 최근 1년간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 나.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가 1억원 이상인 경우

[별표4]

과태료 부과기준(제41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부과권자는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2년 이내에 과태료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40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32조 각 항에서 정한 최고액을 넘을 수 없다.
- 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감경 사유를 여러 개 적용하는 경우에도 총감경액은 그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75를 넘을 수 없다.
 - 1) 위반행위를 사전에 자진 신고한 경우
 -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
 - 4) 법에 따른 신고 또는 허가를 받을 의무가 있는 자가 과실로 잘못된 기관에 해당 절차를 이행한 경우

- 5) 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 신고의무를 위반하였으나 해당 거래에 따른 지급·수령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6) 그 밖에 경미한 과실로 인한 위반행위로서 위반행위자의 위반정도와 경제적 사정 등에 비추어 감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러. 법 제20조제4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 제출을 한 경우	법 제32조 제4항제5호	700만원

□ 「외국환거래규정」

제2-1조의2(지급 및 수령) ① 외국환은행이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지급 또는 수령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4장에서 정한 지급등의 절차에 따라 거래하여야 한다.

② 외국환은행의 장은 건당 미화 5천불을 초과하는 지급등에 대해서는 당해 지급등이 법·영 및 이 규정에 의한 신고등의 대상인지 확인하여야 하며, 지급신청서 및 제4-3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수령의 경우 확인절차를 이행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 외국환은행의 장은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지급등의 증빙서류 및 취득경위 입증서류를 확인한 후 반환하여야 한다.

제4-2조(지급등의 절차) ① 건당 미화 5천불을 초과하는 지급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지급등의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이하 이 장에서 “지급등의 증빙서류”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정에 따른 신고를 요하지 않는 거래로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자금을 국내로 반입하기 위하여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거주자의 지급등 절차 예외) ①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외국인거주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급등을 할 수 있다.

2. 이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수령. 다만, 동일자·동일인 기준 미화 5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수령사유를 확인받아야 한다.

제5-10조(신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자 지급등에 관한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1. 미화 5천불 이하의 금액을 제3자 지급등을 하는 경우(분할하여 지급등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지급등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거주자간 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거래의 결제를 위하여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비거주자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3. 비거주자간 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거래의 결제를 위하여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및 동 자금을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4~13. (생략)

14. 수입대행업체(거주자)에게 단순수입대행을 위탁한 거주자(납세의무자)가 수입대행계약시 미리 정한 바에 따라 수입대금을 수출자인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15. 거주자가 인터넷으로 물품 수입을 하고 수입대금은 국내 구매대행업체를 통하여 지급하는 경우 및 수입대금을 받은 구매대행업체가 수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16. 비거주자가 인터넷으로 판매자인 다른 비거주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하고 구매대금을 거주자인 구매대행업체를 통하여 지급하는 경우 및 구매대금을 받은 거주자인 구매대행업체가 판매자인 다른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17~21. (생략)

22. 거주자가 외국환은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융기관에 개설된 에스스로 계좌(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립적인 제3자로 하여금 거래대금을 일시적으로 예치하였다가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당초 약정한 대로 자금의 집행이 이루어지는 계좌를 말한다)를 통해 비거주자와 지급등을 하는 경우

23~31. (생략)

-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가 미화 5천불을 초과하고 미화 1만불 이내의 금액(분할하여 지급등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지급등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3자와 지급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가 제3자와 지급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은행법」

제34조의2(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실제 자금을 수취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입금처리하는 행위 등 은행이용자에게 부당하게 편익을 제공하는 행위
 2. 예금, 대출 등 은행이 취급하는 상품을 비정상적으로 취급하여 은행이용자의 조세포탈·회계분식·부당내부거래 등 부당한 거래를 지원하는 행위
 3. 은행업무, 부수업무 또는 겸영업무와 관련하여 은행이용자에게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4. 그 밖에 은행업무, 부수업무 또는 겸영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 등을 활용하여 은행의 건전한 운영 또는 신용질서를 해치는 행위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의 구체적인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3(금융사고의 예방) ①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금융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하여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지점(대리점, 국외현지법인 및 국외지점을 포함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의 금융사고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3조(은행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원회는 은행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하여 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및 경고 등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2.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제6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5. (생략)

5의2. 제34조의2제1항을 위반한 은행

5의3. 제3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은행

6~11. (생략)

②~⑤ (생략)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 「은행법시행령」

제20조의2(불건전 영업행위의 구체적인 유형 등) 법 제34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불건전 영업행위의 구체적인 유형 또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4. (생략)
- 5. 그 밖에 은행업무등과 관련하여 은행의 건전한 운영 또는 신용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써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제20조의3(금융사고 예방대책 등) ① 법 제34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은행 임직원의 사기·횡령·배임·절도·금품수수 등 범죄혐의가 있는 행위에 대한 방지 대책

제3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1조 관련)

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6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금액(만원)
가. 은행이 법 제34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69조 제1항제5호의2	3,000
타. 은행이 법 제34조의3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69조 제1항제5호의3	6,000

□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의3(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② 영 제20조의2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감사통할책임자의 확인 및 영업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은행은 그 처리사항에 관한 기록 및 보관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 (생략)
2. 거래처의 통장 또는 인감 등을 보관하는 행위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1. 목 적

이 기준은 「은행법」 등 금융업관련법령에서 정한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2. 과태료 산정방식

가. 금융업관련법상 정해진 과태료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금융업관련법령 등에서 위반행위의 종류별로 부과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된 해당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과태료부과 기준금액으로 한다.

나~라. (생략)

마. 금융업관련법령 및 감독규정에서 업권별·위반행위 유형별로 별도의 기준을 정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근거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바. 과태료 부과에 있어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3. 예정금액의 산정

가.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금액을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한다.

위반결과 \ 동기	상	중	하
중 대	법정최고금액의 100%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보 통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경 미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법정최고금액의 20%

※ 위반결과를 고려함에 있어 그 구분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중 대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전국을 대상으로 행하는 방송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중 서울에 발행소를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은 물론 금융업계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경우 등 사회·경제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금융거래자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등을 의미
- (2) 보 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
- (3) 경 미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거나 당해 금융기관이 신뢰를 상실하여 금융상품 해지 등이 초래된 정도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없고 금융거래자에 피해가 없는 경우 등을 의미

※ 구분기준 중 위반동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상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
- (2) 중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
- (3) 하 : 상 또는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4. (생략)

5. 과태료 부과 면제

위반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

- (1) 위반자의 지급불능 등 과태료 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과태료 부과 실효성이 없는 경우
- (2)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벌·과징금 등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를 이미 받은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인가·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조치, 임원의 해임권고 및 직원의 면직을 이미 받았거나 받는 경우

(3)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5)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당해 금융기관 및 임직원 각각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 위반행위가 당해 금융기관의 경영방침 또는 당해 금융기관의 장의 업무집행 행위로 발생되었거나 당해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의 미흡 또는 감독소홀에 기인하여 발생한 경우 그 임직원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금융시장분석과 은행과	외환감독국
연 락 처	2100-2906 2100-2952	3145-7938